

지방의회 여성의원 의원경력 지속 및 확충 방안

수행과제명 : 지방의회 여성의원 의원경력 지속 및 확충 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 김원홍 연구위원

Tel : 02-3156-7101, e-mail : kwh56@kwidimail.re.kr

요 약

지방의회에 진출한 여성의원 의원 경력과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경력이 지속되거나 확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고찰할 수 있다. 첫째,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상 개선방안, 둘째, 여성정치인 경력단절의 결정적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각 정당의 공천시스템상 개선방안, 마지막으로 경력직 여성정치인 육성을 위한 방안이다.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지방의회에 진출한 여성의원 의원 경력과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경력이 지속되거나 확충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지방의회에 진출한 여성의원 중 10명 중 8명이 초선의원이었다. 이와 같은 초선과 재선 이상의의원간 불균형적 분포는 대부분 선거제도나 정당의 공천시스템 상의 불합리성, 여성정치인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에 따른 구조적인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개선방안을 고찰할 수 있다. 첫째,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상 개선방안, 둘째, 여성정치인 경력단절의

결정적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각 정당의 공천시스템상 개선방안, 마지막으로 경력직 여성정치인 육성을 위한 방안이다.

2. 정책의 추진방향

□ 정치관계법상 개선방안

▶ 각급 지방의회 지역구 여성할당제 30% 의무할당 법제화

- 연구결과 비례의원보다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통한 주민 인지도 등에 기반하여 경력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현행 여성할당의무제를 지역구 30% 여성할당의무제로 전환시켜, 여성 정치인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또한 지역구 30% 여성할당의무제를 지킨 정당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의 30%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을 마련한다. 이는 정당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할 인센티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 앞으로 지속적으로 있을 각종 공직선거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정수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비례대표제 정수와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정수를 확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간 많은 정치학자들이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 정수 역시 인구대비, 공무원 수 대비, 경제발전속도 대비 OECD국가들에 비하여 지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여 왔다.
-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현재 기초의회의 경우 전체 2,888석 중 375석으로 14.9%를 차지하고, 광역의회의 경우 전체 733석 중 78석으로 11.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비율로는 직능대표성 및 전문성 확보

라는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에는 한계를 가진다는 지적이 많다.

-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하면서 현행대로 50% 여성할당제를 유지함으로써, 비례대표 여성의원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예를 들어,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정수 비율을 2:1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여성공천비율을 70% 이상 확대하는 것이다.
- 이는 우선적으로 여성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출 것이며, 이 역시 경력지속의 가능성 확대를 위한 토대로 작용할 것이다.

□ 정당의 공천시스템 개선방안

▶ 공천심사위원회에 50% 여성위원 참여 의무화

- 공천심사위원회에 50% 이상 여성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공천과정에서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및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 그 동안 우리나라 정당에서 구성한 공천심사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남성 주요 당직자로 구성되어 왔다.
 - 제16대 총선 이후 여성이 공천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30% 안팎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금번선거의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만 본다면 한나라당이 28.6%, 민주당이 33.3%이다.

▶ 여성친화적 공천심사기준 표준안 마련 및 가산점 확대

-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지역구 당협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인 여성의원에게 금번 선거 공천에서 소속정당의 지도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물었는데, 중앙당 대표(9.8%)보다 지역위원회 (또는 당협위원회) 위원장(69.1%)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했다.

- 이를 위하여 공천심사기준이나 절차 표준안을 만들어, 공천과정 참가자 누구나 그 결과에 수궁할 수 있도록 공천심사과정을 투명화하고 합리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더 나아가 정치적 소수자인 여성후보에게 가산점 부여를 확대하는 등 공천심사기준이나 절차 표준안을 만들 때, 여성친화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 예를 들어 경선시 대의원 경선이나 상무경선 등 조직과 돈이 필요한 작업보다는 지역 여론조사를 적극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조직과 돈에서 남성보다 불리한 여성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한다.

▶ 의정활동 우수의원 재공천: 공천심사기준에 의정활동실적 반영

-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인 여성의원에 대하여 공천심사기준에 의정활동실적을 반영하는 등 재공천을 담보해 주고, 당 우세지역에 일정 비율을 전략 공천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의원의 경험과 노하우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부각되고 있는 생활정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 경력직 여성정치인 육성방안

▶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성할당제 도입

-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배정은 대체로 전문성, 지역, 경륜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적용되나 현재 여성의원 수가 소수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남성의원에 비해 상임위 위원장이나 간사로 선출되는 경우가 적다.
- 여성의 상임위 배정이나 간부로의 선출은 본질적으로 여성의원 수가 증가하면 해결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재 여성의원들의 경력을 개발하고

리더십을 확보하여 더 많은 후진 여성 후보자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여성할당제 도입이 필요하다.

▶ 주요 당직 여성할당제 도입

- 정당활동에서 주요당직을 역임한다는 것은 여성의원의 정치리더십 향상과 경력개발에 도움이 된다.
 - 당직역임이 소속정당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며 인지도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등 공천시 영향을 미쳐 의회진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따라서 정당은 주요 당직자에 일정비율 여성을 포함시키는 정책을 의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정당별 여성정치인 육성 및 발굴 시스템 구축

- 여성정치인을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정당은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인재육성 및 발굴시스템을 갖추어, 연속적인 기조로 인재를 관리해야 한다. 현행 시스템 상에서는 대표, 주요 지도부의 교체에 따라 인재 발굴 및 육성에 연속성이 없다.
- 특히 정당의 기능 중 하나가 정치엘리트 육성이므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우수하게 수료한 여성당직자에 대하여는 중앙당의 임원이나 각급 선거의 후보로 추천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여성후보군을 확대시키기 위해 중앙당뿐만 아니라 시도당에 여성을 위한 교육팀을 조직하는 것도 필요하다.

▶ 여성후보 지역구 개척·안착 지원 프로그램

- 여성의원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가 지역구 관리이다. 그런데 조사결과 지역구 의원이 비례의원보다 경력지속성이 높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고 그 경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정당이 여성의 지역구 도전 및 안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정책효과

- 여성 정치 리더십 강화를 통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 위 개선 방안이 실시되면 현재의 여성들이 행사하고 있는 정치 리더십의 한계를 극복하고, 확대된 역량은 여성정치인을 육성하고 인재풀을 확장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고 실제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확대된다면, 134개국 중 115위인 한국의 양성평등지수(2009, WEF 발표)를 끌어올리는데 일조할 것이다.
- 여성 지방의원의 경력 지속 및 확충의 기반 마련
 - 위 개선 방안이 실시되면 지방의회에 진출한 여성의원의 경력 지속 및 확충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이를 통해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고 더욱 효율적이며 전문적으로 의정에 반영될 수 있고, 이는 지역사회의 안정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 주관부처 : 국회, 정당, 여성가족부
▶ 관계부처 : 선거관리위원회
